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ertility Policies on Childbirth by Birth Order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 생활과학연구소

부 교 수 유 계 숙*

Majored in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for Human Life, Kyung Hee Univ.

Associate Professor : Yoo, Gye-Sook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epared the comprehensive five-year basic plan (2006-2010)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basic plan aims at recovering the fertility rate to the appropriate level and improving th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ertility policies on childbirth by birth order. The data came from 1,729 adults who gave birth to babies in 2007 and 991 adults as the control group.

The ser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establishing the health and nutrition system for maternity and children, and expanding of tax and social insurance benefit wer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increase childbirths of first children, while the policy measures establishing the health and nutrition system for maternity and children, supporting for daycare and pre-school education, and work-life balance were effective to childbirths of second or third children in 2007. However, the policies of supporting for costs of test-tube baby and expanding childcare infra didn'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s on childbirths in 2007. The implications of study results were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저출산 대응정책(fertility policies), 저출산(low fertility), 출산순위(birth order)

I.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합계출산율 2.1)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1년 1.3, 2005년 1.08까지 낮아졌고, 2006년 1.13, 2007년 1.26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대내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생산가능 인구(노동력)의 감소로 세입기반이 감소하는데 반해,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사회보장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세대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저출산 현상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국가 로드맵을 설정한 2004년부터 시작되었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의 시행으로 본격화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저출산부담 정책의 기본방향은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국민이 갈등 없이 출산·양육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출산 선택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 포함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 주 저 자 : 유계숙 (E-mail : dongrazi@khu.ac.kr)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하고,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은 출산·양육의 책임과 부담이 특정 성(性)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을 유도하고, 근로환경을 유연화 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또한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가사·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적·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안전사고, 학대, 학교 폭력, 유해환경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관계부처 합동, 2006).

최근 정부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출산율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보완계획을 제시하였다. 즉 불임부부 지원, 낙태 예방 사업, 아동 대상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의 정책에 투자를 확대하고, 무상보육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드림스타트 확대 등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교·사회교육 확대를 통해 출산·가족친화적 국민인식을 확산하고, 종교계 등 사회선도층의 핵심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8).

이상과 같은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유형의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집단별 특성과 실제 자녀출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혼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첫 자녀출산시기가 지연되고, 2000년대 들어서 둘째자녀의 출산이 급감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필요한 연구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2007년의 출산순위별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저출산 관련요인과 대응정책의 필요성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미래소득 불안정성 증가 등 소득 요인, 자녀의 편익 감소와 양육비용 증가 등 자녀 요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 양성 불평등, 육아와 직장 양립의 어려움 등 사회·직장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숙희·김정우, 2005).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졌고, 이는 가구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여성의 교육기회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현대산업사회에서 노동의 질이 강조됨에 따라 여성들도 자신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교육을 받으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와 달리 교육받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여성들은 출산 및 양육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느냐 혹은 출산을 포기하느냐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고(장지연·부가청, 2003), 출산 및 육아의 기회비용이 커짐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박승희·김사현, 2008).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간의 부적 관계는 OECD국가들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경제여건이 바뀐다 따라 1980년대 말부터는 정적 관계로 전환되었고(Ahn & Mira, 2002), 이후부터 출산율 변동의 원인으로 교육수준 등 미시적인 개인의 특성이나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출산관련 미시적 요인들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현숙 등(2006)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3년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자료 중 1960년 이후 출생하여 1979년 이후 결혼한 총 4,295명의 기혼여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결혼 이후 출산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첫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성의 임금은 출산 및 이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첫출산과 두 번째 출산을 모두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출산 중단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첫 자녀가 딸인 경우가 아들인 경우에 비하여 두 번째 출산의 가능성이 뚜렷이 증가하는 반면, 첫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는 딸인 경우에 비해 출산 지연효과는 미미하지만, 출산 중단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남아선호경향이 반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김우영(2007)이 1995년 및 2000년에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에서 25-40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의 가능성은 증가하고, 25세를 기점으로 이후에는 출산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시장참여는 연령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결혼 확률을 낮추어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고학력 여성의 출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소득이 높아지게 되어 출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존에 아들을 출산한 여성의 경우, 아들이 없는 여성보다 출산확률이 7.3%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김현숙 등(2006)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경향을 발견하였다. 최근 통계청(2008)의 2007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생성비는 106.1로 자연 성비를 회복하였으나, 출산순위가 셋째아이상의 성비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다시 낮아져 2000년대 초에는 1.1 수준까지 급락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낮은 초저출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조출생률은 2007년 10.0명에서 2008년 9.4명으로 줄어 들었고,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감소했다. 이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1.08명)보다 소폭 높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기술한 저출산 관련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방지하여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저출산 대응정책의 기본 골격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가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하고,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전략은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가사·육아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전략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전사고, 학대, 학교폭력,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들 정책전략 중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 부문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직접적 정책수단이 기보다 출산 이후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이삼식 등, 2008).

2.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

최근 OECD국가들은 출산의 지연이나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여 세제혜택, 가족·아동수당, 보육 지원, 모성·부모휴가 등을 통하여 자녀에 드는 직·간접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D'Addio & Mira d'Erocole, 2005). 우리나라에서도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응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정책은 앞서 기술한 다양한 미시적·사회적 요인들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며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충분한 보육시설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감소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Blau & Robins, 1989; Del Boca et al., 2003; Ermisch, 1989), 아동수당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 역시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arnby & Cigno, 1988; Whittington, 1992; Zhang et al., 1994). 특히 프랑스의 명시적인 출산친화정책인 2004년의 대폭적인 가족수당 개혁은 출생아수가 5%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Landais, 2003). 그리고 스칸디나비아국가의 모성휴가와 부모휴가 역시 출산율 제고 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갖고 둘째자녀의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 2004).

이처럼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나 조건부 양육보조, 출산친화적 세제, 출산·육아휴직 등 저출산 대응정책들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경우 나타날 효과를 모의실험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육보조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하여 이루어질 때 출산율 제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며, 세액공제나 모성휴가와 같이 노동시장 참여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윤영, 2007).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책을 수혜한 가정에서 자녀출산이 이루어졌는지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출산순위별로 살펴보기 위해 2007년 실제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저출산 대응정책의 영향에 대한 지각과 정책 수혜 경험은 출산순위별 출산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경험은 출산순위별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저출산 대응정책의 수혜 정도는 출산순위별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상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7년 전국 출산동향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2007년 자녀를 출산한 1,729가구(첫째자녀 출산 592가구, 둘째자녀 출산 641가구, 셋째자녀이상 출산 496가구)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991가구 등 총 2,720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저출산 대응정책의 영향에 대한 지각, 유형별 저출산 대응정책(보육비·교육비 지원,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모자 건강관리 지원, 불임부부 지원)의 수혜 경험 및 정도를 질문하였다. 분석할 주요 변인의 부호화 체계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 여부(맞벌이 1, 비맞벌이 0), 어머니의 교육수준(대학재학 이상

1, 고졸이하 0), 첫째 또는 둘째자녀의 성별(남아 1, 여아 0), 유형별 정책 수혜 경험(수혜 1, 비수혜 0), 정책 수혜 정도(비수혜 0, 단일 정책 수혜 1, 2개 이상 정책 수혜 2), 출산순위별 출산 여부(첫째 또는 둘째, 셋째이상자녀 출산 1, 비출산 0).

2.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출산순위별 출산에 따른 저출산 대응정책의 영향 지각 및 정책 수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그리고 저출산 대응정책의 수혜 경험 및 정도가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련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출산순위별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분석대상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2007년에 첫째, 둘째, 셋째이상 자녀를 각각 출산한 가구와 비출산가구가 인구사회학적 특징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맞벌이 비율, 부모의 연령과 학력 및

<표 1>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인구사회학적 특징	출산순위	첫째 출산가구 (n=592)	둘째 출산가구 (n=641)	셋째 이상 출산가구 (n=496)	2007년 비출산가구 (n=991)	χ^2 또는 F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292.46a	293.55a	309.69a	348.66b	11.04***
맞벌이 여부 명(%)	맞벌이 비맞벌이	219(37.4) 367(62.6)	125(20.4) 487(79.6)	92(19.2) 386(80.8)	409(41.3) 582(58.7)	120.85***
어머니의 만 연령(세)		30.70a	32.36b	34.69d	33.99c	152.54***
아버지의 만 연령(세)		33.05a	34.81b	37.69c	37.26c	178.78***
어머니의 학력 명(%)	대학 이상 고졸 이하	418(71.6) 166(28.4)	398(65.5) 210(34.5)	231(48.5) 245(51.5)	597(60.6) 388(39.4)	63.27***
아버지의 학력 명(%)	대학 이상 고졸 이하	441(75.8) 141(24.2)	421(69.6) 184(30.4)	279(58.9) 195(41.1)	694(70.4) 292(29.6)	36.33***
결혼기간(년)		2.74a	5.60b	9.27d	8.36c	491.64***
첫 자녀의 만 연령(세)		.91a	4.16b	8.57d	7.49c	787.62***
첫 자녀의 성별	남 아 여 아	280(47.8) 306(52.2)	325(53.2) 286(46.8)	193(40.4) 285(59.6)	474(51.1) 454(48.9)	20.45***

*** p < .001

주1) 무응답에 따라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주2) 같은 행의 a,b,c,d 문자는 Scheffe검증결과 p<.05 수준에서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결혼기간, 그리고 첫 자녀의 연령 및 성별을 중심으로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 가구 중 2007년 첫 자녀 출산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92.46만원, 둘째 자녀 출산가구의 소득은 293.55만원, 셋째이상 자녀 출산가구의 소득은 309.69만원, 비출산가구의 소득은 348.66만원으로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출산가구의 소득수준이 비출산가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맞벌이가구 비율은 비출산가구가 4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첫 자녀 출산가구(37.4%), 둘째 자녀 출산가구(20.4%), 셋째이상 자녀출산가구(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첫 자녀 출산가구가 부모 각각 33.05세, 30.70세로 가장 젊고, 다음으로 둘째 출산가구(34.81세, 32.36세), 비출산가구(37.26세, 33.99세), 셋째이상 출산가구(37.69세, 34.69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 역시 첫 자녀 출산 부부의 결혼기간이 평균 274년으로 가장 짧고, 둘째자녀 출산 부부가 5.60년, 비출산 부부가 8.36년이었으며,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부의 결혼기간은 평균 9.27년으로 가장 길었다. 부모의 학력은 대학 재학 이상인 경우가 첫 자녀 출산가구와 둘째 자녀 출산가구, 비출산가구에서 60~70%대를 차지한 반면,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서는 대학재학 이상인 비율이 아버지는 58.9%, 어머니는 48.5%를 차지함으로써 다자녀가구일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첫 자녀의 연령은 첫 자녀 출산가구가 0.91세이고, 둘째자녀 출산가구는 4.16세, 비출산가구는 7.49세이며, 셋째이상 출산가구의 첫 자녀 연령이 8.57세로 가장 많았다. 첫 자녀의 성별이 남아인 비율은 둘째자녀 출산가구가 5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출산가구가 51.1%, 첫 자녀 출산가구가 47.8%의 순이었으며, 셋째이상 출산가구는 40.4%로 가장 낮았다. 반면 첫 자녀의 성별이 여아인 비율은 셋째이상 출산가구가 5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첫 자녀 출산가구가 52.2%, 비출산가구가 48.9%, 둘째자녀 출산가구가 46.8%로 나타남으로써 셋 이상의 다자녀가구에서 남아선호경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출산순위별 출산가구 및 비출산가구의 정책 영향 지각 및 수혜 경험 차이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가구 및 비출산가구가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다산 분위기의 영향을 지각하고 정책을 수혜한 경험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정책 및 다산 분위기가 2007년 출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주관적 지각, 여섯 가지 정책 유형의 수혜 경험 및 정책의 중복수혜 정도를 중심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7년 출산과 관련하여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셋째이상 출산가구가 2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첫 자녀 출산가구가 18.3%, 둘째 출산가구가 15.6%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7.0%에 그친 비출산가구보다 정책의 영향을 지각한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다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첫 자녀 출산가구가 3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출산가구와 셋째이상 출산가구가 각각 31.1%, 30.4%로 뒤를 이었으며, 2007년 둘째 자녀 출산가구가 다산 장려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은 28.0%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가구 및 비출산가구의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경험을 비교해보았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비·교육비 지원은 2007년 셋째이상 출산가구의 수혜 비율이 6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둘째 자녀 출산가구가 45.3%, 비출산가구가 31.9%, 그리고 첫 자녀 출산가구는 12.5%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보육비·교육비 지원 수혜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의 수혜 경험 비율은 2007년 셋째이상 출산가구가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출산가구가 28.6%, 둘째 출산가구가 26.5%, 첫 자녀 출산가구가 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은 비율은 2007년 비출산가구가 4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셋째이상 출산가구와 둘째 자녀 출산가구가 각각 47.7%, 47.5%로 유사했으며, 첫 자녀 출산가구의 수혜 비율은 37.5%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비출산가구의 평균 자녀수가 1.71명임을 고려할 때, 결코 합리적인 수혜실태라고 할 수 없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수혜한 경험은 2007년 첫 자녀 출산가구가 21.8%로, 둘째 출산가구(15.7%)나 셋째이상 출산가구(12.8%)와 비출산가구(10.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일-가정 양립이 보다 어렵기 때문에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나, 오히려 둘째이상 출산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 수혜 비율이 첫 자녀 출산가구의 수혜 비율보다 낮고,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수혜 비율이 저조함을 고려할 때, 2007년 둘째 이상 출산가구에서는 취업모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여섯 가지 정책 유형 중 가장 수혜 비율이 높은 모자 건강관리 지원은 2007년 둘째 자녀 출산가구와 첫 자녀 출산가구가 각각 75.5%, 75.3%의 높은 수혜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셋째이상 출산가구가 67.6%, 비출산가구가 47.3%로 나타났다. 반면 불임부부 지원정책은 2007년 첫 자녀 출산가구의 4.3%만이 수혜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둘째 자녀 출산가구가 3.6%, 셋째이상 출산가구가 1.3%, 비출산가구가 0.6%로 여러 가지 저출산 대응정책의 유형 중 가장 낮은 수혜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가구 및 비출산가구가 정책의 수혜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셋째이상 출산가구의 중복수혜 비율이 7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표 2>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가구 및 비출산가구의 정책 영향 지각 및 수혜 경험 차이 단위 명(%)

영향 지각 및 수혜경험		출산순위 첫째 출산가구 (n=592)	둘째 출산가구 (n=641)	셋째 이상 출산가구 (n=496)	2007년 비출산가구 (n=991)	χ^2
저출산 대응정책의 영향 지각	큰 영향 미침	12(2.2)	13(2.2)	16(3.5)	9(1.0)	70.33***
	다소 영향 미침	87(16.1)	78(13.4)	83(18.4)	54(6.0)	
	영향 미치지 않음	442(81.7)	492(84.4)	353(78.1)	842(93.0)	
다산 분위기의 영향 지각	큰 영향 미침	42(8.4)	25(4.5)	20(4.6)	10(5.0)	14.67*
	다소 영향 미침	142(28.5)	131(23.5)	113(25.8)	52(26.1)	
	영향 미치지 않음	315(63.1)	401(72.0)	305(69.6)	137(68.8)	
수혜받은 정책 (복수응답)	보육비·교육비 지원	73(12.5)	277(45.3)	323(67.6)	316(31.9)	371.79***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220(37.5)	291(47.5)	228(47.7)	479(48.3)	20.10***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62(10.6)	162(26.5)	159(33.3)	283(28.6)	89.85***
	일-가정 양립 지원	128(21.8)	96(15.7)	61(12.8)	106(10.7)	38.50***
	모자 건강관리 지원	441(75.3)	462(75.5)	323(67.6)	469(47.3)	188.29***
	불임부부 지원	25(4.3)	22(3.6)	6(1.3)	6(6)	30.69***
수혜받은 정도	중복수혜	280(47.8)	430(70.3)	355(74.3)	533(53.8)	167.27***
	단일정책수혜	231(39.4)	130(21.2)	96(20.1)	256(25.8)	
	비수혜	75(12.8)	52(8.5)	27(5.6)	202(20.4)	

*p<.05, ***p<.001

주) 무응답에 따라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표 3>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경험이 2007년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N=655

변 인		B	Exp(B)
인구 사회학적 특징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001	.999
	맞벌이 여부	-2.290***	.101
	어머니의 만 연령(세)	.004	1.004
	어머니의 교육수준	-.399	.671
	결혼기간(년)	.366*	1.442
유형별 정책 수혜 경험	보육비·교육비 지원	-.342	.711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1.674***	5.333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17.542	41523157
	일-가정 양립 지원	1.249	3.486
	모자 건강관리 지원	2.712***	15.054
	불임부부 지원 상수항	-1.734	1.177
		1.306	3.692
-2LL			179.752
Model χ^2			181.953***
df			11

p<.01, *p<.001

둘째 자녀 출산가구가 70.3%, 비출산가구가 53.8%, 첫 자녀 출산가구가 4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일 정책을 수혜한 비율은 첫 자녀 출산가구가 3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출산가구가 25.8%, 둘째 자녀 출산가구와 셋째이상 출산가구가 각각 21.2%, 20.1%를 나타냈다. 이처럼 자녀를 한명 둔 첫 자녀 출산가구가 다자녀가구에 비하여 단일 정책 수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녀를 둘 이상 둔 가구는 한자녀가구에 비하여 중복 수혜비율이 높은 이유는 한자녀가구가 다자녀가구에 비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수혜자격이 보다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경험이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2007년 첫째자녀 출산에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비출산가구 중 자녀가 없는 가구와 2007년에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하고, 여섯 가지 정책의 수혜 경험이 2007년 첫

자녀 출산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7년 출산가구 중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는 맞벌이가구에 비하여 첫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0.10배 높았고, 결혼기간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첫 자녀 출산 가능성은 1.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한 후 여섯 가지 정책의 수혜 경험 여부를 투입한 결과, 모자 건강관리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은 가구는 비수혜가구에 비하여 2007년 첫 자녀 출산 가능성이 무려 15.05배 높았으며,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은 가구는 비수혜가구에 비하여 첫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5.33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그 밖의 저출산 대응정책들은 2007년 첫째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출산가구 중 자녀가 한명인 가구와 2007년에 둘째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에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정책 수혜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는 맞벌이가구에 비하여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0.23배 높게 나타났고, 그 밖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2007년 둘째자녀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4> 참조).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한 후 여섯 가지 정책의 수혜 경험

<표 4>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경험이 2007년 둘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N=895

변 인		B	Exp(B)
인구 사회학적 특징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000	1.000
	맞벌이 여부	-1.459 ***	.233
	어머니의 만 연령(세)	.035	1.036
	어머니의 교육수준	.116	1.123
	첫 자녀의 만 연령(세)	.008	1.008
	첫 자녀의 성별	-.254	.775
유형별 정책 수혜 경험	보육비·교육비 지원	.689 **	1.992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055	1.056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004	.996
	일-가정 양립 지원	.607 *	1.835
	모자 건강관리 지원	1.056 ***	2.874
	불임부부 지원	.850	2.340
	상수항	-.941	.390
-2LL		717.292	
Model χ^2		129.824 ***	
df		12	

*p<.05, **p<.01, ***p<.001

<표 5>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경험이 2007년 셋째이상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N=1,077

변 인		B	Exp(B)
인구 사회학적 특징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001	.999
	맞벌이 여부	-1.299 ***	.273
	어머니의 만 연령(세)	-.012	.988
	어머니의 교육수준	-.090	.914
	첫 자녀의 만 연령(세)	.087 **	1.091
	둘째자녀의 성별	-.340 *	.712
유형별 정책수혜 경험	보육비·교육비 지원	1.253 ***	3.499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248	.780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198	.821
	일-가정 양립 지원	1.197 ***	3.309
	모자 건강관리 지원	.431 *	1.539
	불임부부 지원	1.736	5.673
	상수항	-.730	.482
-2LL		891.883	
Model χ^2		143.305 ***	
df		12	

*p<.05, **p<.01, ***p<.001

여부를 투입한 결과, 모자 건강관리 지원과 보육비·교육비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수혜한 가구가 비수혜가구에 비하여 2007년 둘째자녀 출산 가능성이 각각 2.87배, 1.99배, 1.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세 유형의 정책이 2007년 둘째 자녀 출산에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비출산가구 중 자녀가 두 명인 가구와 2007년에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셋째이상 자녀 출산에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정책 수혜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예상한 바와 같이 첫 자녀의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셋 이상 다자녀가구가 될 가능성은 1.09배 증가하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는 맞벌이가구에 비하여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0.27배 높았다. 한편 둘째자녀가 여아인 가구는 남아인 가구에 비하여 셋 이상 다자녀가구가 될 가능성이 0.71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순위가 셋째이상의 후순위로 가게 되면 부모의 남아선호경향이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하고 정책의 수혜 경험 여부를 투입한 결과, 보육비·교육비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

원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 정책을 수혜한 가구가 비수혜가구에 비하여 2007년 셋째이상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각각 3.50배, 3.31배, 1.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정도가 2007년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N=655

변 인		B	Exp(B)
인구 사회학적 특징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001	.999
	맞벌이 여부	-2.337***	.097
	어머니의 만 연령(세)	.005	1.005
	어머니의 교육수준	-.523	.593
	결혼기간(년)	.274	1.316
정책 수혜 정도	정책 수혜 정도	2.351***	10.499
	상수항	1.511	4.530
-2LL		180.107	
Model χ^2		181.599***	
df		6	

p<.01, *p<.001

<표 7>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정도가 2007년 둘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N=895

변 인		B	Exp(B)
인구 사회학적 특징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001	.999
	맞벌이 여부	-1.381***	.251
	어머니의 만 연령(세)	.031	1.031
	어머니의 교육수준	.028	1.028
	첫 자녀의 만 연령(세)	-.021	.979
	첫 자녀의 성별	-.251	.778
정책 수혜 정도	정책 수혜 정도	.603***	1.827
	상수항	-.389	.678
-2LL		752.350	
Model χ^2		94.766***	
df		7	

*p<.05, **p<.01, ***p<.001

<표 8>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정도가 2007년 셋째이상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N=1,077

변 인	B	Exp(B)
인구 사회학적 특징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998
	맞벌이 여부	.433
	어머니의 만 연령(세)	.983
	어머니의 교육수준	.927
	첫 자녀의 만 연령(세)	1.078
	둘째자녀의 성별	.740
정책 수혜 정도	정책 수혜 정도	1.799
	상수항	.632
-2LL	962.371	
Model χ^2	72.817***	
df	7	

*p<.05, **p<.01, ***p<.001

4.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정도가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대응정책의 수혜 정도가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에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비출산가구 중 자녀가 없는 가구와 2007년에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 비출산가구 중 자녀가 한명인 가구와 2007년에 둘째자녀를 출산한 가구, 비출산가구 중 자녀가 두 명인 가구와 2007년에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하고, 정책의 수혜 정도와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 여부와의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표 6>, <표 7>,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저출산 대응정책의 중복수혜는 2007년 둘째자녀나 셋째이상 자녀의 출산 가능성을 1.8배 높이며, 첫 자녀의 출산은 무려 10.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첫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정책의 수혜 정도가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7년 자녀를 출산한 1,729가구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991가구 등 총 2,720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비·교육비 지원,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모자 건강관리 지원, 불임부부 지원정책이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 여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의 출산이 저출산 대응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셋째이상 출산가구가 2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첫

자녀 출산가구가 18.3%, 둘째 출산가구가 15.6%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7.0%에 그친 비출산가구보다 정책의 영향을 지각한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저출산 대응정책 수혜 경험을 출산순위별로 비교한 결과, 보육비·교육비 지원,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은 셋째이상 출산가구의 수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비율은 비출산가구가 가장 높았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혜 비율은 첫 자녀 출산가구가 가장 높았다. 한편 모자 건강관리 지원은 둘째 자녀 출산가구와 첫 자녀 출산가구가 유사하게 높은 수혜 비율을 보였고, 불임부부 지원정책은 첫 자녀 출산가구가 가장 높았으나, 수혜 비율은 4.3%로 극히 낮았다. 한편 출산순위별 출산가구 및 비출산가구가 정책의 수혜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셋째이상 출산가구의 중복수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수혜 경험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모자 건강관리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은 첫 자녀 출산 가능성을 높여주며, 모자 건강관리 지원과 보육비·교육비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둘째자녀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중복수혜는 둘째자녀나 셋째이상 자녀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며, 첫 자녀의 출산은 무려 10.5배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친 영향을 여섯 가지 정책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불임부부 지원정책과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은 그 밖의 정책과 달리 2007년 출산순위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가지 유형의 정책이 정부의 출산장려책으로 추진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출산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임시술 평균 성공률은 약 20-30% 수준으로

낮으며, 시술진단도 1회에 300만원 이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장애요인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06년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제시한 기준은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인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50만원씩 연간 2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불임부부 대부분의 월소득 기준이 정부의 기준을 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여서 정부가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부들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불임부부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1회 평균시술비의 50% 수준을 지원받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 마련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본 연구결과에서 불임부부 지원정책은 2007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향후 불임부부 지원정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술비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한편 2007년에 각 가구가 수혜할 수 있는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은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한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직장보육시설 지원, 유치원 종일제 확대 등으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시설을 통하여 간접적 수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정책의 체감 효과가 떨어지고,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구나 보육료 상한제로 인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시설의 서비스가 저하됨으로써 부모들의 수요가 국공립시설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07년 둘째자녀나 셋째이상 자녀의 출산에 공통적으로 기여한 정책은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육비·교육비 지원정책과 모자 건강관리 지원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정책 중 2007년 둘째자녀 출산가구가 보육비·교육비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수혜한 비율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각 45.3%, 15.7%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자녀를 두고 둘째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비·교육비 지원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혜율을 보다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하여 수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사례에서와 같이 모성휴가나 부모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자녀출산 및 둘째자녀의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의 모의실험 연구결과에서도 여성근로자의 출산

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운영,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현황을 살펴볼 때, 송명희(2006)가 서울 등 전국 대도시에서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의 여성근로자 568명과 기업체 212곳을 대상으로 산전후휴가 사용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 산전후휴가기간이 90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 여성근로자의 58.2%만이 법정 휴가일인 90일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산전후휴가 사용일수는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나 직종,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사무직이나 서비스 및 영업직에서,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산전후휴가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산전후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업체의 입장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 이내라는 응답비율은 52.9%, 90일 이상이라는 응답비율은 37.5%로 기업체에서 현 제도에 대하여 불만이 잠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90일의 산전후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노동부가 2006년 1·4분기 산전후휴가 이용자 1,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64.4%가 육아휴직을 희망했지만, 그 중 34.1%는 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직장분위기, 복귀불안 등 직장 내부문제가 80%로 압도적이었다. 따라서 향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중복수혜는 2007년 둘째자녀나 셋째이상 자녀의 출산 가능성뿐만 아니라 첫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저출산 대응정책이든 각 정책이 개별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효과는 매우 작다(McDonald, 2007). 따라서 맞벌이 가구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과 같이 다양한 정책들의 중복수혜를 통하여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 자녀가구가 현재보다 증가해야하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 둘째 자녀 출산가구가 자녀수 셋 이상의 다자녀가구나 심지어 자녀수가 하나 적은 첫 자녀 출산가구에 비하여 저출산 대응정책과 다산 장려 분위기의 영향을 지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주관적 지각에 의한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에서는 한 자녀를 두고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미시적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적 개입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적 규모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수혜가 자녀출산에 효과가 있는지 출산순위별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secondary analysis)한 연구설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통제변인 이외의 변인들(예: 정책은 수혜하였으나, 시기적으로 터울 등을 고려하여 출산하지 않는 경우)은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출산 결정에 관련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전국적 규모의 정책효과 분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저출산 대응정책의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작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김우영(2007).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결정 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07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출산을 결정요 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조세연구 원.
-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박승희·김사현(2008). **여성노동자의 저출산 원인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뉴패러다 임센터.
- 송명희(2006). 산전후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학술용역결과보고서.
- 이삼식·유계숙·윤홍식·최효진(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지연·부가청(2003).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교육. **여성연구, 제65호**, 한국여성개발원.
- 조윤영(2007).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 출산과 노동공급 동시 장려방안을 중심으로. KDI정책포럼 제 174호(2007-02). 한 국개발연구원.
- 최숙희·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통계청(2008). 2007 한국의 사회지표.
- Ahn, N. & Mira, P.(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67-682.
- Barmby, T. & Cigno, T.(1988). A sequential probability model of fertility patter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1), 31-51.
- Blau, D. M. & Robins, P. K.(1989). Fertility, employment, and child-care costs. *Demography*, 26(2), 287-299.
- D'Addio, A. C. & Mira d'Erocole, M.(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 Del Boca, D., Locatelli, M., Pasqua, S., & Pronzato, C. (2003). Analysing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rates in Europ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Northern and Southern Europe. WP Child, Turin.
- Ermisch, J.(1989). Purchased child care, optimal family size and mother's employment: theory and econometric analysi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 79-102.
- Landais, C.(2003). Le Quotient Familiale a-t-il stimulé la natalité française. DEA Thesis.
- McDonald, P.(2007). Low fertility and policy. *Ageing Horizons*, 7, 22-27.
- Røsen, M.(2004).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Norway:A reflection on trends and possible connections. *Demographic Research*, 10(10).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 Whittington, L. A.(1992). Taxes and the family: The impact of the tax exemption for dependents on marital fertility. *Demography*, 29(2), 215-226.
- Zhang, J., Quan, J., & Van Meerbergen, P.(1994). The effect of tax-transfer policies on fertility in Canada, 1921-1988.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 181-201.

□ 접수 일 : 2009년 01월 12일

□ 심사 일 : 2009년 03월 05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30일